

제43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31일(월)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해양수산부 소관
나. 해양경찰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해양수산부 소관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7)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8)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5)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5)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70)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8)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5)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9)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6)

1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5)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5)
1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8)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5)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8)
2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7)
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4)
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2)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0)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9)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3)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3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5)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3)
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8)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0)
3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9)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0)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1)
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9)
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6)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4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6)
44.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9)
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2)
46. 업무현황 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5
 가. 해양수산부 소관
 나.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5
 가. 해양수산부 소관
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7) 5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5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8) 5
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9) 6
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5) 6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5) 6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70) 6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8) 6
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6
1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6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1) 6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5) 6
15.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9) 6
1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6) 6
1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5) 6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5)	6
1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8)	6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6
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935)	6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8)	6
2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7)	6
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4)	6
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6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6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2)	6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0)	6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9)	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3)	6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6
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6
3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5)	6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3)	6
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8)	7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940)	7
3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9)	7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0)	7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1)	7
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9)	7
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6)	7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7
4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6)	7
44.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9)	7
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2)	7
46. 업무현황 보고	11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자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해양수산부 등 7개의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과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밖의 기관들은 기관장의 인사말씀만 듣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간부소개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해양수산부 소관

나.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해양수산부 소관

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7)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8)

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9)
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5)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5)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70)
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8)
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9)
1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0)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1)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5)
15.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9)
1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6)
1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5)
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5)
1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8)
2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5)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8)
2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7)
2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4)
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9)
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4)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2)
2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0)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9)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3)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3)
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4)
3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5)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3)

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38)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0)
 3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69)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0)
 3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1)
 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9)
 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6)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42)
 4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6)
 44.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9)
 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82)
- (10시14분)

○위원장대리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5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글로벌 선도해산물류공급망 구축,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조성할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하였으며 국내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 건조 지원으로 친환경·스마트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였고 대표 수산식품인 김도 수출액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글로벌 수산식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권역별 거점 어촌·어항 개발, 어촌 지역의 생활기반과 복지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연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2조 136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84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8조 432억 원 중 7조 468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81억 원은 이월, 346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97억 원을 배정받아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에 688억 원,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물 상생활인에 30억 원 등 7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38억 원은 이월, 4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9119억 원을 조성하여 용자사업에 4276억 원, 경상사업에 2304억 원 등 6587억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532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사·의결해 주신 대로 충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SOC 건설사업과 용역사업의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빈틈없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미래형 경비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해양안전관리과 구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에 특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은 453억을 징수결정하여 41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조 29억 원으로 이 중 1조 953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63억 원은 이월하고, 22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함정유류관리, 서부정비창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 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윤성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1항까지 39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해수부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째, 우수해양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갯벌 세계유산 관리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률의 위탁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법정민간대행 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탁과 대행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향후 규정에 맞게 예산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 하단입니다.

셋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사업 시행 이후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해양수산부는 순회 수거 시스템 등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은 사업준비 미흡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주식회사 수협유통의 가맹자 모집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어업허가 등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선 안전사고 시 신속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 다만 제1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부과에 더해 어업허가·정지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다소 과중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연안화물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업과의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유가 보조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명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한 유류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t 이상 원양어선의 매월 1회 이상 비상대비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조합의 자기자본 구성항목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자금 차입 및 법인 출자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 조합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설립등기사항에서 제외하고 이에 관한 연례적 변경등기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장, 셋째 수협의 실손의료공제에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수협의 실손의료공제에도 금융위가 정한 전송 대상 서류와 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식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중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양사고 발생 시 다수의 자율수중로봇을 투입해서 수중수색을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개발한 업체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국가안보 등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성과물은 그 목적 그리고 사용 주체가 해경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고, 해양감시·정찰 무기체계로의 확장 가능성 및 공동연구개발자로 방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안보와의 연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술안보 차원에서 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을 업체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더 높은 농도의 주취 조종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한 점은 유사입법례와 책임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업무현황 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28분)

○위원장대리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주요 현안에 대해 주신 고견들을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주요 해운기업들도 부산 이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한 약 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와 어업인 고령화로 수산업의 터전인 연안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올여름 폭염을 통해서도 실감하고 있듯이 기후위기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의 AI 전환은 아직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해양수도권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8월 22일에 출항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업운항에 필요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극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지원체계도 견고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에 발맞춰 포항, 광양, 제주까지 아우르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의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의 연안과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권역별 연안경제 활성화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항만과 배후단지, 어항과 주변 어촌지역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선박 전환과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한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등 연안 경제의 핵심인 해운항만 분야의 친환경·스마트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등 해양이용 수요를 조정하고, 해양공간을 질서 있게 관리하여 지역

과 상생하는 바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로 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AI에 기반한 수산양식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고, 맞춤형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바다를 터전삼아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NLL 인근에 부설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함과 동시에 해양경찰 및 해군과 합동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독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강화하고, 해양조사선의 우리 해역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올해 말 부산에 개소할 예정인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해양정보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는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식 해양경찰청장직무대리님 인사말씀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보임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치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해양재난은 한층 복잡하면서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저희 해양경찰청은 해양안보, 국민안전 및 지속 가능한 바다를 실현하고자 많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정적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고 위성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영역 인식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감시하는 한편 국제 해양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해양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연안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수색구조 훈련 강화 및 민간 구조대와 협력을 확대하여 해양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법 환경의 변화에 맞게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 최우선의 수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고위험 복합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다목적 화학방제함을 건조하고 해양오염 위험요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외국어선들이 서해 NLL 인근 해역은 우리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하였습니다.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NLL 인근 해역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체계를 개선하는 등 범정부 종합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늦여름 연안활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 성수기 특별대책 등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선제적으로 증가 배치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통해 해양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안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제도를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 연안사고 인명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1만 3000여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 보고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해운·항만·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고 AI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부산항을 구현하는 한편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안전한 항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크루즈 활성화를 통한 해양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이 동아시아 물류 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업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로 다변화를 통해 인천항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고 대중국 등 물동량 창출에 힘써 수도권 관문항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동화 부두 및 배후단지 등 항만 인프라 개발을 통해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여객 인프라 조성과 마케팅 강화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최관호 사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최관호** 안녕하십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최관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광양항은 지난해 총 물동량 2억 6700만t을 처리하여 국내 수출입 제1위 항만이자 종합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퍼지컬AI 기술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개발, 여수광양항의 우수한 LNG, 철강, 원유 인프라를 활용한 북극항로 정책 이

행, 신규 배후지 개발을 통한 화물 창출형 자주항만 구축, 부족한 항로 수심을 확보하는 중심준설 사업 추진, 여수세계박람회장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과 이번 주 9월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운항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항은 1963년 개항 이래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현재는 국내 최대 액체물류 중심 항만으로서 타 항만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보다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항만을 넘어 미래 친환경 연료인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를 취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물류 거점 항만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부두별 기능을 최적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 항만을 조성하겠습니다.

울산항은 국내 최초로 항만하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항만의 안전을 선도하고 있고 액체화물 취급에 따른 잠재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 최대 규모 소방정 도입,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 등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 공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수산업과 수협에 대한 현안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수산업

을 만드는 것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어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도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100억 원의 유류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이번 여름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경영 재기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수협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에도 임직원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이 부진했던 일선 수협의 경우 중앙회와 은행의 전사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뜻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어촌경제를 이끄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과제를 이루어 나가기에 놓여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수협만이 가진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더욱 증진해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이 국내외 곳곳에서 널리 뻗어나가는 것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산업의 근간인 어촌과 바다가 활력으로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탈바꿈하도록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저희 수협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전국 어업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물 생산자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촌과 수산업 그리고 어업인을 위해 마련하고 추진할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상세 업무 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결산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 및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주요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및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 위원입니다.

황종우 장관님, 기후변화로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 직면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해양 분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현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그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규모와 행정비용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예산 규모가 크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행정비용과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25년 예산현액 530억 중에서 318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지급은 대상 어업인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 그러니까 23년에서 25년까지 평균 110여 건의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더 중요한데 유형별로 보면 가장 큰 게 행정착오입니다. 최근 3년에 64%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착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문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은 일선 공무원들이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어떤 매뉴얼이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정확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로다가 신고어업으로 신청할 때 겸업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어업은 직불금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해수부 답변을 보니까 겸업하는 자는 신고어업으로 신청이 불가능한데 허가 또는 면허 중 하나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침 해석의 내용이…… 담당 공무원들이 늘 업무에 대해서 숙달돼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 지급되는, 행정착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는 매뉴얼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착오가 없게 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행정착오가 64%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행정착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재관 위원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 비율이 23년도 47%, 24년도 28%,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지급을 해 놓고 ‘잘못 지급했습니다’라고 해서 대상자한테 가서 다시 ‘이것 잘못됐으니 반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것은 참…… 그런 상황은 연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들이 지침의 어떤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어떤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정비용, 대국민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업 못지않은 중요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번 보시고 그 지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 지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침이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하게 되고 또 일선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주기를 관리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절차가 뭐라고 보시나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저는 비용 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 2개 기관에서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들어가는, 즉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 그다음에 폐어구 등 해상에서 기인한 쓰레기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육상 기인 쓰레기가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량 기준으로 한 것을 보니까 76%, 해상 기인 쓰레기가 한 24%.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은 예측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육상 기인 쓰레기가 55%, 해상 기인 쓰레기가 44%.

즉 2개의 어떤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의 해상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이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현재는 두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필요한 곳은 23곳인데 올해 두 곳, 내년도 예산 두 곳…… 이것 하는데 그러면 12년 걸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에 필요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빨리 그런 차단막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 돼 있지만 R&D 예산을 통해서 좀 더 차단막을 설치하고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추가 시간 없이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해양경찰청장이 공석된 지 얼마된 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난해 12월부터 차장 대행체제로……

○김용태 위원 대략 9개월째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용태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청장도 대행, 검찰총장은 대행의 대행,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체제가 9개월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다수 수사기관의 장들이 공석 상태인 것, 해양경찰청장 공석 상태인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은 인사 문제여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해양경찰청법 제11조에 보면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청권자입니다. 그런데 제청권자께서 인사에 대한 문제여서 답변드리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그런데 9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 보셨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지금은 차장 대행체제로 계속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하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제청권과 관련해서 뉴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제청권을 행사했다라고 물러나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9개월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서 여권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장관님 제청권 그 권한 행사하지 않으시면 그 논리대로라면 탄핵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

○**김용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제청권을 권한이 아니라 절차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뜻, 대통령의 뜻, 청와대의 뜻을 확인해서 그대로 옮기는 통로라고만 생각하면 뜻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장관님.

그런데 법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장관의 제청으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관님께 법률상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청이라는 권한은 권한입니까, 관행입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조항으로 본다면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헌법의 권위가 높습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높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헌법의 권위가 높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제청권을 실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해양경찰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중국 구조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한중 해양경계확정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차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조업 대응, 해상구조, 연안 안전, 여기에 32일 뒤면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해상사건의 사실상 최종 수사 책임자가 해양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해상치안이 걸린 사안들입니다.

법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은 직무대행체제로 9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전까지는 적어도 장관님께서 제청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일까지도 장관님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꼭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 꼭 제청권을 법과 헌법에 따라서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처리한 사건 3090건 중에 190건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6.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3% 안팎의, 두 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태 위원 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최근 보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구율이 3%였는데 6%로 이렇게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 전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0월 2일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잖아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래서 위원님 저희 해양경찰은 수사 심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완수사에 대해서 본청에서 수사심사관이 이것을 한 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해양 사건은 일반 육지 사건과 다르게 초동수사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수사 강화와 인력 대비가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해경에서 순증된 수사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수사 인력은 지금 현행 정부로 하게 되면, 최근 5년간 저희가 77명을 증원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로 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면.

○김용태 위원 그게 형소법 대비로 이후에 순증을 계획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형소법 대비 이전에 계획한 건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형소법 대비 이전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이제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서 모든 수사가, 해양경찰과 관련된 수사가 대다수가 올 텐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닐까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이 잘 설명을 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잖아요.

제가 추가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대리 윤준병 예, 간략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제가 청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수리조선단지 조성 및 해양 MRO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리조선단지 조성이 정부의 국정과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중에 수리조선단지 유치하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아마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리조선단지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인 만큼 해양수산부에서 잘 추진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월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28년에 착공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28년 착공이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한미 조선 협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마스가 시대를 열어 가는 선박과 함정의 MRO 산업 활성화의 선결 과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선과 특수선 건조 기술을 보유한 조선 강국입니다. 그런데 자국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를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대형 선박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3만t 이상 대형 국적 선박은 90% 이상을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송옥주 위원 1만t에서 3만t급 중형선도 58%가 해외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연간 해외 수리 횟수가 2022년에는 90회에서 24년에는 152회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게 국정과제로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형 구조는 단순히 비용 지출을 넘어서 국내 정비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요. 또 정비 과정에서 선박 설계라든지 정비 기술이 유출돼서 안보와 보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숙련 인력이 복귀하고자 하는데 일감이 없어서 산업 생태계까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몇 가지는 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안 부분들도 있고……

○송옥주 위원 예, 최근 마스가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미 해군 함정이 우리나라에 MRO 수주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공 산업에서도 MRO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수리조선 산업 활성화가 아주 적기라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 MRO 산업은 해

양수산부만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사실은 저희보다는 산업부가 더 연관성이 크고요.

○송옥주 위원 산업통상부 또 방위사업청 그런 데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유관부처끼리 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리조선 해양 MRO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기도 하고 예산 지원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2028년 착공이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기 달성을 위해서는 인허가 원스톱 처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요. 또 친환경 스마트 수리시설 및 인력 양성 투자 확대를 위해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조선단지가 민자 유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민자가 일부분을 건설하고 유치를 하기는 하지만 공공성의 공백은 꼭 채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9월 3일 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과 법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노동진 수협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협의 금융과 관련된 부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철저히 하고 계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지금 전사적으로 해서 은행과 우리 수협중앙회가 일선 수협의 채무도 NPL을 만들어서 처리해 주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부처가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거기의 제일 하 부분에 한 10개 수입이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요? 이게 지난해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협의 금융 부실에 대한 질타나 개선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제언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올 6월 말 현재 2조 4500억 정도가 지금 있고요. 전년 말보다는 10.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협의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도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말씀으로는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회원수협들도 다들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은 없으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채권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제 영향 때문에 채권 비율이 한 40%, 20%, 30% 나오는 채권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일선 수협점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중앙에서 어떻게 협조해서 좀 숨을 쉬게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연말 결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향을 보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사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 포항남구·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다. 울릉도 같은 데는 오징어에 대한 명성이 이제는 없지요. 울릉도에 오징어 안 잡힙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군산 쪽으로 오징어가 잡히고 이래요. 요즘 동해 앞바다에 참치 잡히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상휘 위원 바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새벽에 어판장에 가면 소위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 말갈다고 이야기해요. 바닥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인 어부, 어민들의 경영 위기를 탈피하고 또 달라지는 바다에 대한 기후환경 변화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폐업 지원을 하는 게 이 감축사업이지요. 감축사업인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좀 시끄러워요. 오늘 31일 입법예고 의견 듣는 마지막 날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상휘 위원 충분히 의견들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중간에 또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상향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옛날 포항 구룡포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도 1만 원짜리를 물어 간다 할 정도로 어황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고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게 감축사업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요 의견들이 제가 들어 보니까 현재 제시된 폐업지원금이 너무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전체적입니다. 지배적이라고 하지요. 더군다나 해수부의 기준 자체가 최저가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문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게 이게 중론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경상북도 관내에서 삼사 년간 지원한 폐업지원금하고 차이가 세 배에서 네 배 납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지원법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폐업 못 하는 거지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기존의 폐업지원금 체계로만 본다면 굉장히 어업인들께서 보상을 받는 지원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가 방법을……

○**이상휘 위원** 현실적인 게 아니라 해수부에서 감축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현실 괴리가 너무 커요. 더군다나 오늘 입법 예고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관련 법안 자체는 거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걸로 됩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종에 따라서 경상북도 폐업지원금 평균 금액을 내놨는데요.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중형트를 같은 경우에 40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는 31억입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 해수부에서는 14억이에요. 서너 배 차이 나요.

통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6억인데 지금 저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폐업을 하겠습니까? 감축에 대한 정책이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아니라 보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제도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금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법이 발의돼서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견해로 관할 부처에서는 업종별로 어민별로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의견 수렴이라는 자체가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해수부가 감축사업이 현실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절차 자체를 거쳤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발의해도 저 상태로 서너 배가 차이 나는데, 경북 관내하고. 자료 통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타개하실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업인들……

○**이상휘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장관님, 이러면 못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정당국하고……

○**이상휘 위원** 재정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어민들로부터 들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합장님들하고 다 만났고 그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어떤 현실적인 대책도 사실 나와야 됩니다.

어종 자체가 달라졌어요. 동해에서 잡히는 생선과 남해에서 잡히는 생선과 서해에서 잡히는 생선이 다 달라요. 그러면 배를 다 바꿔야 돼요, 어구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폐업에 대한 지원은 그걸 하나의 보완적 완충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구조로 옮겨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해수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축하겠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이게 최소한의 어선 가격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발의가 됐고 그런 법이고 정책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외람되지만 장관님, 최소한의 행정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어민들의 불만 대충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적당히 버티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도 다방면으로, 트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종별로 그리고 범위도 많이 넓혀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청권 갖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상휘 위원** 그런데 제가 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건의를 하셔야 돼요.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와대에 가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먼저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네요. 뉴스는 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작을 좀 해 주실까요? 7분 다시 시작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윤준병** 준비됐습니까?

다시 시작하시지요.

○**신장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보시면 총계가 2021년에 10만 6925t에서 25년에 12만 3764t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는 같은 기간에 62.4%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남광주 빼놓으면 나머지는 줄었습니다. 전남광주에만 해양쓰레기가 왕창 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디냐? 신안, 영광, 진도입니다. 신안, 영광, 진도가 90.4%예요, 해

양쓰레기. 그중에서, 신안은 90.4% 중에서도 전체 100%를 놓고 보면 82.5%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가 신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양쓰레기가 어디서 온 거냐 모니터링해 보니까 국내 기인 쓰레기가 아니에요. 해외 기인 쓰레기의 82.5%가 신안에 집중됐어요.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지역으로 다 갔네.

○신장식 위원 큰일났습니다, 이것. 그러다 보니까 한 40억 원 규모로 신안군에서 예산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그다음 PPT 보시면 실제 해양사고, 표류 부유물 사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부유물 감감 사고가 535건, 15.2%, 최근 5년 연평균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나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 60군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년간은 못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왜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이것 모니터링 자료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쪽, 아까 그 94.4%, 82.5%,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지난 2년간은 안 했습니다. 이것 하셔야지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 PPT 보시면 여기 가거도하고 만재도 여기는 모니터링 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떠 있어요. 60군데 대충 모니터링해서는 다 파악도 안 돼요. 제대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했으면 예산 반영하셔야 돼요. 이게 각 해당 지자체에서 나온 거면 해당 지자체에서 돈 내는 게 맞지요. 해외 기인 쓰레기예요. 국비 지원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저는 빠르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다국적 해양폐기물 집중지역 파악하시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까지 해야 일 제대로 하는 것이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문, 해수부장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서른이 됐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피해 학생. 지금은 학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트집 잡힐까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꺾꺾 눌러 참는 아픔, 계속되는 혐오·선동과 악성 댓글. 2014년 4월 16일로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장돼 왔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가족도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새로 가족을 꾸린 분이세요.

그런데 또 안산마음건강센터 답변 이렇게 죽 보시면 유가족, 생존자, 생존자 가족 할 것 없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싸여 있어요. 그런데 원래 어땠습니까? 원래 시행령으로 24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트라우마 지원, 정신건강 지원. 그런데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29년까지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9·11 테러, 미국 몇 년까지 의료 지원하는지 아세요? 2001년에 9·11 테러 발생했지요. 2090년까지 의료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5년 딱 늘려서 2029년이면 끝납니다, 지원이. 이것 기한 없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14년 4월 16일 날 국가는 이 아이들의 생명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치료라도 끝까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장식 위원** 제가 개정법안 낼 겁니다. 법안 낼 거니까요 해수부장관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항만공사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재정경제부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편 TF, 한국항만공사로 4개 항만공사 통합하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보도됐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입장 된가요? 해수부 입장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협의할 때 어떤 입장 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항만공사의 여러 가지 취지나 그다음에 항만별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장식 위원** 특성 설명드렸어요? 다음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항만공사라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 모두 기능이 다릅니다. 각각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4개의 생태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저는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셔서,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알아는 듣겠습니다. 알아는 듣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항만공사의 역할, 각각의 생태계……

특히 항만별로 독립된 공사 설립하면서 항만위원회 구성도 시도지사 추천권 인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역, 지방정부에 자치권과 추천권을 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평택·당진항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항 중에서 유일하게 항만공사가 없는 항인데요. 보니까 아직도 배후단지 매립 속도 너무 늦고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PPT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AI 전환 중입니다, 4개 항만공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건 해수부에서, 공사가 따로 없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5개월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 임기 중에 뭘 하나 하고 가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반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어업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 주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시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한 가지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10년 동안 다섯 분의 장관을 봤는데 기억나는 분이 김영춘 장관이 어촌뉴딜사업 하나 한 것 기억나고 옆에 계신 조승환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의 피담 엄청난데도 그래도 소비 위축 대응한 것, 딱 2개 기억나요. 나머지 분들 연구 엄청 열심히 시키고 학자 출신 오니까 그냥 계속 부하들 연구만 시켜요, 공부시키고.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 10년 동안 좋아진 거라는 게, 장관이 뭐 하고 왔다는 게 안 보여요. 장관님 사람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것 뭐 하나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저것 다 기반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있다가 축사하고 연구시키고 그러다 가 버리는 거밖에는 안 돼요.

지금 어촌뉴딜사업 전환해서 어촌신활력사업 하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은 3.0으로 다시……

○**이양수 위원** 예, 어촌뉴딜 3.0으로 다시 왔지요. 뭔가 좀 바뀌야 된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이양수 위원** 내가 그 지적사항 봤는데요. 다 틀린 소리들이에요. 핵심은 비켜 가고 있어요. 어촌뉴딜사업에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어촌신활력에 썼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그게 안 나타나요, 최초 취지, 사업 취지의 효과가.

이걸 용역기관한테 맨날 쥐 봐야 용역기관들이 고기가 안 난다, 이제 고기 잡아서 먹고사는 시대가 지났다, 어촌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촌뉴딜300으로 해서 마을마다 100억씩 지원하고 200억씩 지원해 가지고 그걸 어촌 관광으로 활성화하면 고기를 좀 잡아도 그걸 또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꼭 고기에 기반하지 않아도 어촌 관광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추진했는데 어촌뉴딜사업, 신활력사업 전부 다 어업 기반시설에 돈 다 들어갑니다. 회관 짓고 마을센터 짓고 회센터 정비하고 다 이거예요. 내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자전거라도 해라, 그러면 그래도 연간 한 30만 명이라도 오지 않겠나……

이게 어촌뉴딜사업이 어촌계하고 해양수산과, 시군 해양수산과에 가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촌 민원 해결하고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에 다 들어가지 애초 목적인 어촌 관광하고는 하나도 접목이 안 돼요.

이번에 돈, 이제부터 돈 내려보내실 때 시군의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가 협의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관광과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고는 계속 이 돈 그냥 새서 어업 기반시설, 어구 보관창고만 만들어 주고 막 이걸로 들어가요.

물론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라서 그게 아까운 건 아니지만 당초 취지,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어촌을 방향을 전환해서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원인 분석부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어선안전조업법 있잖아요. 24년도에 특정 해역 출어 시에 비대면으로 신고하고 나가는 것 그걸 2024년, 2년 전에 이미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 국회 책임이기는 하지요. 법사위 책임이기는 한데 그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다른 법과, 특사경 부여하는 것과 연관해 갖고 한다고 이것만 계속 미루는데 2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께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특정 지역 해역의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법사위원장 만나세요. 만나서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어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얘기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나 봐요. 장관님이 어민 입장에서 어민들의 어려움이라고 좀 호소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외람됩니다만 그 2개가 결합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돼서, 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동의를 해서 안 되면 다시 떼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이양수 위원 빼서 올라가시지요, 뭐. 7월 달에 특사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춰진 것 같은데 되면 같이 하고 안 그러면 빨리 떼어서라도 해수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양수 위원 올해 동해안 참다랑어 강원도 쿼터가 몇 t 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강원도 쿼터를 정확하게……

○이양수 위원 강원도 쿼터가 대략, 한 449t인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전체가 1219였는데 쿼터를 계속 늘려서 아마 700t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기억으로는……

○이양수 위원 전체가 1200t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는 100t이 안 돼요. 92t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많이 나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 다른 데도 못 쓴 것 갖다가 449t까지 올렸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못 쓴 게 아니고 선망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나서 당겨서……

○이양수 위원 아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배려해 줘서 고맙고.

그런데 하루에 400t이 나와요. 하루에 400t 나오고 그다음 한 2~3일 뒤에 또 200t 나오고, 그러니까 200t 추가 쿼터 주고 150t 쥐 봐야 그냥 하루 자체도 소진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국제수산물기구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부터 전체 잡을 수 있는 쿼터량 늘리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늘리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웬만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다음에 저희 쪽에 얼마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쿼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올해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어민들 수익 그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정치망 같은 데 잡힌 개들은 다 죽어요. 죽은 것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그러면 또 밀려와 가지고 사체가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변에 막 널브러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비율이 2.3%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3%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외해 쪽을 많이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30%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대한 늘리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이유는 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무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서 행위제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까지 선정된 게 4개 해역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국가생태공원,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가가 지금 지정한 게 네 군데인데 충남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다시 기획하는 것으로……

○**임미애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게 접근성 부분하고 경제성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를 같이 따지는데 비용, 낙후도나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경북의 호미반도 같은 경우에 기재부 예타조사 지금 막바지 단계다, 정책평가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KDI의 분석 틀이 이 정책 대상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

○**임미애 위원** 지금 해수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지향 목표하고 KDI

가 평가하는 내용하고 보면 사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지요. 이것 한번 살펴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도 약간 이상한 부분들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정 목적의 경우 예를 들면 ‘호미반도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에 보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사업특화 항목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을 보면 정책사업의 목표하고 평가하는 KDI의 의견하고 지표가 서로 달라서 이것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성 평가에 저희들도 생태공원이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호미반도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처에서 어쨌거나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열심히……

○**임미애 위원** 동해안 권역에서는 지금 한 군데거든요. 한 군데여서 이 부분은 좀 신경써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도 호미반도를 따로 두 번이나 다녀왔고요. 충분히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KDI가 낸 의견서를 보면서 이것은 이 사업을 하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평가지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 KDI하고 이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서로 공유하시고 평가지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부산항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 외국인 선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어선원의 도입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 지정해 달라 요구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진행은 조금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8월 달인가요—인도네시아 선원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지정된 일이 있었지요? 부산에서, 7월 달이지요 사건이 발생한 건 7월 달인데 부산의 한 모텔 8층 방에 감금된 인도네시아 선원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탈출을 하려다가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8월 5일 날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정을 했고 이것은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뒤에 피해자로 확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중국어선이 국가관리 무역항에 정박을 요청한 건수가 436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부산항이에요. 부산항인데, 물론 부산항이 세계적인 환적항이어서 급유, 수리, 선원 교대 뭐 이런 일들을 하기에 아주 조건이 우수해서 저는 정박 신청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어선이 신청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하는 일들이 부산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인권침해가 보고된 배에 한해서 항만이용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비영리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해수부에서는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나봐요. 이것 걸러 내는 역할을 해수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보가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두 가지, 항만국 통제가 있고 또 어선에 대한 통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확보되면 아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마 그 자료들이 저희……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는 이것을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행정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걸러 내는 역할들은, 사전 작업들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부산항이 인신매매를 하기 위한 선박이 정박해서 일종의 이런 조치들을 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피해 가는 항구로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오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린피스나 이런 시민단체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특히나 출입국관리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지금 CPTPP, 그러니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제 공론화 과정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공론화 과정을 하면 그러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겠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니까요. 아마……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CPTPP에 정부가 가입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지금 정부가 선언했고 그것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당연히 있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해수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들 영향 분석도 하고 있고요.

○강승규 위원 영향 분석해 봤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했는데 얼마, 600억인가 뭐 그런 것 나왔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600억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규 위원 실제 얼마 정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할 때 이런 금액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이 협상이 그저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려는 WTO 체제의 다른 FTA하고 달리 이것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이든 뭐든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수산물이나 이런 데서 제일, 지금 우리 농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유류세 면세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지금 해수부 입장에서 어업용 유류세 면세가 CPTPP 가입되면 당연히 폐지된다고 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치가 이루어지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CPTPP가 가입해도 면세유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면세유를 못 하게 하는 경우는 남획의 경우하고 IUU라고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획의 경우에도 가입국인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조치를 하고 있으면 면세유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자원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분히 있다. 지금 한 6000억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분히 유지된다. 그러면 지금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무래도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수입될 경우에……

○강승규 위원 후쿠시마도 들어오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들어올 때 다른 어떤, 우리의 방어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있습니다.

다.

○강승규 위원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PTPP라는 룰 동맹에서의 규칙 속에서 어떤 방어 수단이 있냐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를 유지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민감 품목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협상을 하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협상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계속 협상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개 품목이나 되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대표적으로 본다면 참돔이나 방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식어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관세가 10%, 29%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수산물의 관세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50% 안팎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관세가 다 다릅니다.

○강승규 위원 다르겠지요.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10% 내외가……

○강승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를 해야 되지 않아요?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영향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면밀히 파악한다는 것은 지금 수산업계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CPTPP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한다는 전제를,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것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겠다라고 거의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많이 돼야 되고 농업계나 어업계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론화한다 그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을 내가 죽 보니까 26년에는 가입할 것처럼 하다가 올 초에 8월부터 공론화를 하겠다는데 가입한다는 원칙을 이미 세워 놓고 공론화는 형식상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림부나 해수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과 피해가 얼마일 건지 상당 부분 다 계산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 이제부터 공론화하니까 따져 볼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가입 문제가 가입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12개국과 다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길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말을 계속 하면서 협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절차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1년 반 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언급이 되고 계속 강도를 높여 오면서, 이제 검토해서 가입, 26년에 가입 추진을 밟겠다라고 했다가 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정도로 하려면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할 때도 있지요, 농수산물 검역절차 이 부분을 US 데스크, 특별 데스크를 만들어서 검토하겠다는데 실제로는 US 데스크를 만들면서 그동안 지체돼 있던 검역절차, 10년 20년 방치된 걸 지금 다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CPTPP 때도 공론화한다 그러면서 협상 들어가면서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다른 공산품 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을 다 허용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부 상징적인 것 하나 민감품목으로 정해 놓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농산물과 수산물이 약간 다른데요 CPTPP의 SPS, 검역 관련된 규정들은 사실 저희 쪽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완화된거나 하는 부분의 우려는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건 농산물 얘기고, 제가 예를 든 거고. 그 전체 절차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해수부의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입이 자유화되는 게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는 일단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민감품목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전남광주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실시가 시작이 됐는데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 선박들이 직접 운항해서 수집한 여러 객관적 자료를 잘 취합해서, 하여튼 간에 이 북극항로 활성화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북극항로추진본부에 부울경만 참여하고 전남광주가 빠져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정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전남광주 쪽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사람을 보내 주지를 않아 가지고.....

○**주철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 1월에 전남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예 거절당했고 그 뒤에 말이 없다고 하던데 아마 통합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

을 수 있는데 주무부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서 빨리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부울경만의 해수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해수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아시겠지만 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북극항로 물동량 3400만t 가운데 약 80% 이상이 에너지하고 자원 화물입니다. LNG하고 가스 응축수가 약 60% 정도 되고 원유와 석유 제품이 21%쯤 돼서 전체 물동량의 80% 이상이 에너지·자원 화물인데 해수부도 아마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컨테이너 항로와 함께 러시아의 LNG와 석유 등을 운송하는 벌크 항로의 상업 운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서항로, 북동항로 모두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에너지·자원 중심의 벌크 항로까지 준비해야 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여수·광양항의 관계자를 관장하는 전남광주통합시 직원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하루빨리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주철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상업화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로로, 여수·광양항은 에너지·자원 화물 중심의 벌크 항로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수·광양항은 이미 가스와 원유·LNG·석유 제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시설과 저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수 석유화학산단하고 광양제철소 등 국내 최대 수준의 에너지 수요·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어요. 단순히 수입 에너지를 하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가공·소비한 뒤에 다시 수출할 수 있고 또 별도의 신규 인프라 없이 글로벌 에너지·자원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사실상 미-이란 전쟁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달에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망 개발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여수의 대규모 저장과 항만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싱가포르 같은 국제 브랜딩 및 트레이딩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여수·광양항을 글로벌 에너지 환적·병커링 전용 항만으로 지정해 주시고 북극권과 미국, 중동, 호주, 중앙아시아 등에서 대형 에너지 선박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 환적,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육상 탱크터

미널 반입 저장, 브랜딩과 품질 조정, 국내 공급 및 제삼국 재수출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자원 허브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공감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하고 비상시 국가 에너지 우회 비축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고 산업적으로 신규 환적 물동량과 LNG 친환경 연료 병커링 수요를 창출해서 여수나 전남 동부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역적으로 항만물류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를 대체하는 새로운 트레이딩 시장이 도입되게 되면 금융·보험 트레이딩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장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여수·광양항을 에너지·해양·경제 중심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가 즉시 북극항로추진본부에 전남 광주 직원들을 좀 데리고 오셔야 되고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여수·광양항의 글로벌 에너지 환적·병커링 전용 해역 지정과 함께 에너지·자원 허브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발의해서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해수부는 그만큼 열성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블루오션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해양레저관광 부분에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세계박람회장을 민간에다가 팔아 버리지 않고 국가기관인 항만공사에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재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남여수는 10억, 항만공사가 10억을 냈는데 국가가 10억을 안 내고 있어서 하다가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빨리 내서 용역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는 이 2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장에 복합 컨벤션 들어와야 되고 또 박람회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미사리에만 있는 해상경정장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해양레저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좀 들려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1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 부 소관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도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철현 위원** 일본은 스물네 군데 해상경정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우리도 미사리 한 군데, 내륙에 있는데 해상경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잘 진흥시켜야 됩니다. 돈 버는 관광,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 서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관님 이하 관련 기관장님, 배석해 계시는 직원분들을 뵈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견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윤준병 살살해.

(웃음소리)

○김성범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정책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금주 위원 이해충돌 방지 아니에요?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수협중앙회장도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업 문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우선은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감척지원금 공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3년간 평균 수익액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계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부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데 최초에 입법예고를 했다가 최근에 재예고를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주된 내용이 뭐였지요, 재예고하는 내용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준액을 조정했습니다.

○김성범 위원 부령을 입법예고했다가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 기준액을 이렇게 재예고하는 사례가 많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저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예고된 기준도 어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어업인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먼저 입법예고했던 데에 비하면 진일보한 그런 예고라서, 어쨌든 장관님도 그렇고 관련 직원들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김성범 위원** 기회를 줄 때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협의를 했고 또 차관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어업인들이 지금 이 기준액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의 대책인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 30년간 감척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지금 근해어선만 지난 32년간 3120척을 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약 2조 가까운 예산이 들었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원은 모자라고 어획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업종 간의 갈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아무래도 이게 띄엄띄엄해서 계속 감척을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방식으로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또 철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철회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하고 난 뒤에 폐업 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것이 다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감척을 해서, 특히 제 생각에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감척을 해서 자원량과 어선세력을 균형을 맞추는 게 지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한 31년까지 근해어선의 36% 정도를 감척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범 위원 36%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정도를 하면 남은 어선세력들이 충분히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딱 적정한 선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중앙회장님, 30%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한 40%, 45%, 50%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저는 60%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몇 프로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60%.

○김성범 위원 60%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성범 위원 회장님이 또 너무 나가시네.

어쨌든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시되……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장기간에 투자할 것을, 그러면 31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간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5년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27·28·29·30·31 5년간……

○김성범 위원 5년간, 그 향후에 5년은 죽 10년, 15년 늘어질 예산을 5년 동안 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물론 내년부터도 하겠지만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어선원 복지라든지 생산성을 다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재정 당국 설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계속 설득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범 위원 수산정책실장님 나와 계세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예.

○김성범 위원 우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최현호 현재 저희가 기준가격 중심으로 1단계는 했고요. 필요하다면 좀 더, 지금 어업인들 중에서는 NLL 쪽의 서해 어업인들이 야간 어업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척지원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동해안의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도 단기간 집중 감척, 한시적 감척을 하는 게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법을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하여간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한번 장관님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조승환입니다.

장관님, 전직 차관님 발언하고 옆에 문금주 위원님께서 분위기 안 좋다 그러시는데 분위기를 안 좋게 가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잘 안 좋아지지가 않아서 이게 좀 문제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먼저 결산이니까, 장관님 생각에 해수부의, 해양수산부의 예산과 결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집행이 잘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장관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항상 실무자들은 이월시키고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 차관님 잘 쓰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는, 예를 들어서 200억이 이월돼 가지고 예산현액이 400억이 됐는데 그다음 해에 또 200억 집행이 되고 또 200억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수부 자체 예산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들 예산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별로 한 일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 저도 장관 하면서 좀 더 고민하고 했을 건데,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7년도 예산을 짤 때 이월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27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어떤 사업이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관광 쪽도 그랬고, 하여튼 올해 넘어가면 또 집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시설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미반영을 아예 해 버렸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이월이 또 안 생기기 때문에……

○**조승환 위원** 그 미반영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지금 어떤 부분들이 미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할 때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미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김성범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번에 빼놓고 나면 다음 해, 내년에 예산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내년에 이번에 미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28년 예산에 다시 살린다라는 약속을 하고 명백하게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그 작업도 저도 하겠습니까마는 내역 주시고 또 더 할 게, 예산 칠 게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수온 문제가 이제 완전히 상례화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조승환 위원 지금 이 고수온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고수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결국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이 조금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육상 양식장으로 올라 오기 어려운 어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종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를 줘야, 품종을 바꾸든지……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품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외해로 아예 나가든지, 외해에서도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침강……

○조승환 위원 침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육상 양식장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왜 항만공사가 지역별로 이렇게 4개가 설립됐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각각 항만별로 자립이 가능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항만공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항만공사 설립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했습니까마는 기

본적으로 항만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기반이고 지역항만이라는 게 기반이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수출 산업구조기 때문에 국가공사로서 지역의 항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합하겠다, 이것에 대한 해수부 입장은 뭐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재정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항만공사사장님,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국가에 배당한 금액이 토털 얼마쯤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지금 설립 이후에 한 3000억 정도는……

○**조승환 위원** 3000억 이상 될 겁니다. 3000 한 삼사백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지금 지역에서는 국가에 배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굉장히 큰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 재투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배당을 정부에 주고 있는 항만공사들인데, 이걸 통합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항만공사 설립 이전의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념을 가지시고 이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항만공사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연 나오지를 않아요. 해수부에 물어봐도 그렇고 어디 물어봐도 한국항만공사 만든다, 한국항만공사 어떻게 만들겠다, 전연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PTPP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CPTPP 가입 시에 수산물만은 사실상 100% 개방된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한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의 수산업 위축이 볼 보듯 뻔한 것이라든가 것이고, 두 번째는 오전에도 질의가 있던데 면세유 지원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이 셀 것이라든가 하는데, 먼저 기체결 FTA상 보면 상대국 개방률은 10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표 보시면 60~80%, 90% 수준, 이미 상대국은 100% 개방이 돼 있다는 거지요. 상대국은 거의 손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만 더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져 보니까 CPTPP의 회원국 수산물 무역적자는 1조 원이 넘는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모든 보조금은 통제·감축 대상으로 밝혀져 있잖아요, 협정문에도 나와 있는 거고. 만일 과잉어획 지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유류보조금이 지원됐다면 이것 또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전에 질의 내용, 답변 내용은 봤습니다만 과잉어획이다, 남획이다 평가하는 이것도 상당히 기준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기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마……

○**문금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산, 지난 22년에 영국은 CPTPP 가입 위해서 후쿠시마 등 일본지역 제품 방사능 검사 의무화를 철폐했던 말이지요. 지난주에 농림부장관도 얘기하던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별도로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가입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농림부가 됐든, 제가 봐서는 특히 해수부는 더 어업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어업 생산기반 투자 그리고 어가소득 보장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 물려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명심하겠습니다.

과잉어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자원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잉이라고 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어민들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해수부장관님, 정말 어민들 피해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문대로 완벽한 피해 감소 또 어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려요. 안 그런다면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직을 걸고서라도 장관님은 막으셔야 돼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결산이니까 결산 관련 자료 한번 봐 볼게요.

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있던데 목적을 보면 재난, 홍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1.8%의 저리로 일일 한도 최대 1억 원, 1년 상환 조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23년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보통은 한 200억 정도 수준을 세우다가 24년에 갑자기 1000억이 돼 버려요. 아마 그때 정치권에서, 특히 당시 여당인 국힘에서 요구해 가지고 갑자기

1000억 그다음에 25년은 800억,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대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200억 세운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24년에는 777억, 25년에는 739억, 누적 1516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물론 불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해수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여러분들 15% 감액 평가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문금주 위원** 여러분들 잘못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시 정치권의 요구였고 기재부가 정치권 요구 받아들여서 세워 버린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당시에는 일단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랬으면 집행이나 잘하시지 집행률이 11%, 2.3%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약간 예측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한도가 있는데 더 받지를 못하는……

○**문금주 위원** 그때 장관님 누구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때는……

○**조승환 위원** 접니다.

○**문금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조승환 위원** 1000억 정치권에서 요구한 것 아니고 해수부에서 받은 겁니다.

(윤준병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금주 위원** 저는 해수부장관님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아무리 정치권이 요구를 해도 정확히 예측하고 집행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두 분, 전직 차관님·장관님 계신다고 아까 보니까 사무실에 티타임 하는 분위기던데 보기 좋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천일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전 면적이 매년 줄어 들고 있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염전들이 태양광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줄겠지요. 그런데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또 턱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7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kg 포대당 7000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수요가 좀 줄어든 면이 있고요.

○이개호 위원 아무리 수요가 줄어들어도 그렇게 줄겠습니까?

수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수입량이 2021년에 15만 4000t 그리고 작년 말에 28만 7000t.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28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5년 만에 딱 2배로 늘어났네요.

이렇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자급률은 당연히 떨어져서 2021년 64%에서 2025년 46%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실제 현장, 대량 소비처를 비롯해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그래도 당연히 수입산 암염보다는 우리 천일염을 더 선호 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개호 위원 당연히 하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지역구 영광의 천일염 생산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죽 천일염 생산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야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 말씀은 ‘정부에서 신속하게 수매를 일부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의지가 시장에 닿으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반드시 오른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검토해서 반드시 천일염 수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이삼 주 전에 염업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요.

○이개호 위원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저희들 방안도 지금 거의 정리가 됐고, 가격이나 양 같은 것 지금 거의 정리가 돼서 조만간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요, 꼭 발표해 주시고요.

지금 생산원가는 포대당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지난번에 확인할 때는 10kg당 2900원이니까 20kg에 한 6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개호 위원 60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가격은 거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까 7000원 말씀 주셨는데……

○이개호 위원 7000원은 그래도 제가 좀 후하게 쳐 준 거고요, 실제로 5200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할 걸로……

○이개호 위원 그래서 수매에 대한 의지 좀 꼭 밝혀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개호 위원 또 비축예산이 제 기억에 과거에는 보통 한 200억 내외 정도로 계속 편

성을 했었는데 금년 정부 비축예산이 30억 원으로 줄었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개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게 원래 30억을 잡았을 때도 수매는 10억에 보관료가 20억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매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강구를 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추가 수매 물량 같은 경우에도 또 창고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십시오.

클린 국가어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계마항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국가항으로 승격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비교적 항세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그런 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5년에 해수부에서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공모에 응해서, 그때 12개 어항 중에서 7개를 선정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당연히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지역에서 난리였지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잔치 분위기……

그런데 불행하게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2년 동안 7개 선정된 어항 중에서 5개만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2개 어항, 그러니까 영광 계마항과 삼척에도 하나가 있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2개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개호 위원 삼척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광은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항에 쓰레기도 많고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최근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쓰레기가 떠다니고 또 막 흩어져 가지고, 저도 오다가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습시다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난리법석입니다.

2025년 이후에 계마항이 정부예산에 계속 2년 동안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니, 저희들도……

○이개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 계속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이개호 위원 기재부가 안 해 줬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5개는 해 주면서 왜 계마항은 안 해 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개호 위원 계마항의 지금 심각한 수준을 놓고 보면 다른 항을 교체하더라도 계마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해수부 산하 공무원들, 지역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를 다시 인식하셔서 반드시 내년에…… 지금 이 예산은 총액계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항만별로 예산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마 항만별로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국회에라도 태울 수 있도록 같이 좀 많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것 좀 세워서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에 계마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농어민 가슴에 대못 박는 CPTPP,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

○김선교 위원 정부가 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최근 8월 27일 날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해수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CPTPP를 하게 됐을 때 수산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구요.

○김선교 위원 CPTPP는 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국내 생산 기반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국내 생산 기반이 걸린 문제이다 이것에 공감하시나 이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수산 분야 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답변을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향평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용역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결과를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개방률 100%, 97%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개방 수준별 수산업 피해도 분석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것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같이 분석하고 있어요?

지난 2022년 정부는 수산업 피해를 15년간 연평균 최대 72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수산물 수입액은 약 61억 6000만 달러.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한 33억 달러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33억 3000만 달러고 수입은 64억 4000만 달러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미 수입이 수출의 2배 가까이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번에는 단순 생산 감소액이 아니라 품목별 수입 증가, 산지 가격 하락, 어업 소득 감소에 생산 기반 위축까지 제대로 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영향평가 결과를 가입 여부 결정 전에 국회와 어업인들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김선교 위원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일단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현재 회원국에서 철폐 사례가 없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철폐 사례가 없다는 말씀……

○김선교 위원 현재 회원국 철폐 사례가 없다, 철폐 사례. 철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기에 대한 보호방안은 마련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저희가 피해 보전 대책, 경쟁력 제고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회원국이 가입조건으로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이것만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부분을……

○김선교 위원 이것이 CPTPP, 자동차·반도체 등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수산업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최소한의 영향평가도 공개하고 피해 대책과 재원을 마련해서 어업계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선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그런 약속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선대책 후가입 그것을 분명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내수면에 대해서 좀 여쭙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수면 한 글자도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신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황종우 장관님, 관심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관심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국내 내수면 면적이 국토의 몇 퍼센트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내수면 면적은 잘 모르겠고 생산량은 4만 4000t으로 1.1%입니다.

○김선교 위원 국토의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만 4000t 맞고요.

그러면 생산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몇 조……

○김선교 위원 생산금액.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6조 정도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김선교 위원 부가가치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민물장어, 향어, 송어, 붕어, 잉어, 메기, 다슬기, 제철 등 해수어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업인의 생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내수면어업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수산정책에는 소외돼 있다’. 이것이 아주 늘 하시는 말씀들이예요.

장관께서 취임 이후 내수면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몇 번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민물 쪽은 한 번 만났었고요, 9월 10일 날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전체 내용을 다 들을 예정입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은 내수면어업이 수산정책의 변방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 이것을 동의하시지 않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변방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보니까 기본적인 어업행정조차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아는 것도 있고 아마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세미나 때 잘 들어보고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 하나만 여쭙볼게요.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업허가의 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죄송합니다만 뒷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매매하고 임대하고 상속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따로 보고받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꽤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자체 내 국조특위 후속조치 TF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감사원이 자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철저히 기획된 불법·강압적 표적감사이자 조작감사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실제 불법·위법 행위가 확인된 내용 보면 포렌식 복제본 미폐기 및 검찰 임의 제공했고 요건 미충족 불법 긴급 포렌식을 했고 강압 유도 문답, 피조사자 인권 유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해경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들어 있는데 278GB가 넘는 해경 소속 직원들의 문서, 사생활 자료, 무관한 수사기록 검찰에 고스란히 넘겨줬다 등등 해서 기존에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안보를 이용해서 정부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제기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한 감사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만큼 해수부와 해경, 과거에 잘못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치한 내용들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해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해수부나 해경 공히 내부적으로 과거에 좋지 않은 내용들 진상조사하고 거기에 조작감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직자들 명예 회복도 시키고 지원·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불법 유출자료 회수도 하고 부적절하게 제출된 내용 파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강압·조작으로 번복됐던 발표 철회 또 공식 입장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준 씨의 해수부장 부여한 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다른 부분들은 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해양수산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여튼 전제가 잘못돼 있으면 전제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해경청장 직무대행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인사권이다 보니까 해수부장관 답변하는 것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황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내란특검이 해경·경찰 지휘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8월 23일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10월 2일을 디데이로 해서 개편되고 있고 그 조직체계가 공소청·중수청·해경·경찰청 포함해서 아마 10월 2일 날 디데이로 잡아서 여러 가지 인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답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CPTPP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해수부가 지녀야 될 자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문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2021년, 2022년, 그때 가입 추진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최소한도 그때 우리 어민들이 반대했던 사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치유 여부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의 경우에는 시장 개방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는 전면 무관세 개방이 된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장관이나 이쪽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된 내용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업용 면세유 이 부분이 일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수산보조금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동남아·중남미산 저가 수산물 이렇게 확대되면 내수시장이 초토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를 하니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한다, 장관직을 걸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도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이하 다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수협중앙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협중앙회 지방이전하고 중앙회장 직선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농협이나 수협중앙회 지방이전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 이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지방분이신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 및 어업인들에게 철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수협은 수산업 중심지인 전남으로 이전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강원도 속초에서 거기 가려면 7시간 걸리니까……

○주철현 위원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지금 후임 회장님 선거일이 내년 2월이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주철현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농협하고 축협은 직선제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을 하

고 있는데 수협도 조합원직선제 찬성하십니까, 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제가 찬성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주철현 위원 아니아니, 중앙회 회장님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저도 제 입장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것도 어업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민감한 사항인 건 사실입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가 3년 전, 4년 전 조사해 봤을 때 조합원들의 거의 70%~80%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조합장님들이 반대하셨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런데 조합장들의 90%도 반대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은 찬성이시지 않냐고요. 지금 대세가 농협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러는데 수협만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수협은 특별하게 91개가, 약 4000여 개 섬으로 또 구성돼 있고 이렇다 보니 수협 조합원 비율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특히 91개 조합장님들이 직선을 하시는데 실제 조합원이 이삼십 명밖에 없는 조합도 있고 9000명 넘는 조합도 있어요, 여수수협 같은 데. 이게 말이 됩니까? 9000명 넘는 조합도 1표, 조합원 20명도 안 되는 16명도 1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래서 선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주철현 위원 조합장, 조합중앙회장들의 직선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수협도 빨리 산림조합처럼 선제적으로 직선제 수용하시고 가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왜 이렇게 자꾸 밀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선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고민은 많이 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타율에 의해 치를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년 2월이 중앙회장 선거일인데 바로 한 달 뒤에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 구십일 분의 조합장들이 자기 임기종료 한 달을 남겨두고 4년이나 일할 중앙회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원래는 신임 조합장들이 선출되고 나서 자기하고 함께 일할 중앙회장을 뽑는 게 맞거든요, 현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한 달 뒤에 만료될 사람들이 뽑아 놓고 집에 가 버리면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게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냐 이 말이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초선 돼 가지고 출마한 자의 역량도 모르는데 투표를 행사하는 것도 그건 단점이고 그리고 4년, 8년, 길게는 12년간 있으면서 출마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봤기 때문에 하고 가는 것도……

○주철현 위원 할 수 없네요. 중앙회장님, 수협은 보니까 타율에 의해서 지금 개혁을 강요당하려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고요.

여수항만공사 사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세계박람회장 관리와 관련해서 오전에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바람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대규모 MICE 행사를 여수에서, 전남에서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수 해양관광의 진흥의 거점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인데 뭔가 중요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경쟁장 같아요. 경쟁장 같으면 여러 가지, 관광객도 모을 수 있고 또 세수도 생기고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항만공사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최관호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수시하고 전남광주특별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공공체육 부문의 유치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광양항 AI 스마트항만 구축사업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해수부는 100% 예산을 내려 주는데 지금 못 하고 있으시잖아요. 서둘러 주시고.

관련해서 지역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입니다. 꼭 좀 챙겨서 지역기업들이 국책사업에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최관호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장관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은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니까 업무 파악은 다 돼 있으실 거고. 그런데 즉 공무원 생활 해 오시면서 해수부 보셨고 그다음에 장관까지, 수장까지 되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수부 업무를 보는데 지금 업무 중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업무, 없애야 될 업무 하나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다, 두루뭉술한 것 말고 하나. 이것 1개, 1개씩을 꼽으라면 뭐뭐를 꼽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앞쪽은 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양수 위원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선이랑 연안여객선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수 위원 현대화 부분, 안전에 관한 거네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왜냐하면 대양……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가지만 해수부장관님한테 건의하신다면 뭘 건

의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저는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도 60년대 노르웨이처럼 직권 감척을, 내가 아까 60%라고 하니까 너무 오버한다는데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동해안에는 어선이 행선할 수 없는 조건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감척해서, 현대화해서 어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장관님이 하시는는 않겠지요. 그런데 한번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귀어귀촌 사업, 어촌을 잘 살게 해 놓고 귀어귀촌을 시켜야지, 지금도 못 살고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자꾸 귀어귀촌만 하라고 사람들 막 장려하고 교육시키고…… 그거 사람들 사지로 몰아 넣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돈 있으면 현재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주세요. 잘 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어귀촌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돼요.

귀어귀촌에 팔려 있는 사업이 많아요. 청년 정착 위해서 얼마 지원하겠다, 거기에 주거를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이러는데 전부 다 사탕발림이고 돈은 돈대로 들고 본인들은 젊음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갔는데 결국은 다 낭비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지요.

귀어귀촌, 진짜 말이 좋아 귀어귀촌이고 텔레비전에서 멋있게 나온다고 그냥 그거 하는 거지, 그 돈 있으면 현재 어촌·어항 거기를 잘 살게 만드시고 보내시라는 말씀을…… 꼭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 저도 감척 사업으로 꼽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양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제 잡는 어업은 끝났으니까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르는 어업으로 가려고, 잡는 어업 끝내고 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어민들이 그냥 절대빈곤 상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감척 사업을.

지금 해수부에서 그동안 수천 척을 감척을 했고 뭘 했고 막 그러는데 그 숫자로 보지 마세요.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 왔던,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거 그냥 거의 다 폐선되고 경매로 넘어갈 것들 겨우 그렇게 감척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감척 가격이 낮으니까 자발적인 감척이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빛의 빛의 빛의 빛이 이자가 늘어 가지고 은행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지금 감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주, 어민들을 아예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배들을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시가만큼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감척에 응할 수 있도록 감척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감척 단가를 높여서 자발적인 감척들을, 좀 고령화되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대신에 감척을 한 번 했으면 다시 그 돈 가지고 다른 배 사 가지고 어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좀 마련해 가지고 감척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는 어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르는 어업으로 갈 수 있는 그 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앙회장님 말씀 가끔가다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폭염과 고수온·적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바다가 참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났는데요. 지구 평균 바다 온도가 10년 동안에 0.3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는 0.7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해마다 국정감사나 상임위를 여름철을 끼고 할 때마다 고수온 피해와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가 된 기분이고 또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피해 대책과 예산 반영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에서 고민하시는 게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고수온 대응 장비 그다음에 조기 출하, 긴급 방류, 히트펌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대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단순히 그 장비에 대한 예산 증액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폐사한 어류가 작년보다도 한 5.6배 정도가 증가했고요. 또 고수온 특보 기간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적조 생물 밀도가 증가해서, 고수온뿐만 아니라 적조 현상까지 일어나서 복합적인 그런 재난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장관님께서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업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 투입 이외에 예방 시설이라든지 또 유전육종이라든지, 복구비 또 보험도 강화해야 되고요. 국가재난대응 등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좀 세밀하게 보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는 서해 바다에 있습니다. 화성에도 바다가 있는데요. 저희 어민들께서는 바지락을 많이 채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지락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올해에는 완전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 바지락 관련된 부분을 재해보험에 좀 포함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수협에서는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난 부분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열추 정리는 다 되었고 아마 곧 협의해 가지고, 어촌계·내수면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바지락이 급감하는 부분들은 현 상황인 거고 또 보니까 해수부라든지 경기도나 화성시나 여러 수산물 관련된 연구단체에서 이 고수온에 내성이 강한 그런 어패류에 대한 종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럭조개라든지 새조개나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현실에 적응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 이 부분들이 개발을 마쳐서 고수온 피해를 받는 우리 어민과 또 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안 그래도 어저께 질의서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일단 경기도 연구소 쪽에서 패류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쪽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다르게 저희 쪽에서는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기반 연구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피해가 심하면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나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군급식에 수산물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급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 부분들을 직영급식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현상이 좀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 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비중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민과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공급망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급식과 관련된 거는 국방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수산인과 또 수산업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질의서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분석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도 현장의 어업인들을 만났을 때 많이 주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군급식 쪽에 많이 공급을 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랑 적극 협의해서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고 또 분노를 일으켰었던 선란 1·2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 다 철거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선란 1·2호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떤 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또 관측 부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 양식 1·2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이가 1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 먼저 전체적인 어떤 기반시설 하나를 뺏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국제적 불법성, IUU 등으로 제재할 방안들도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IUU는 주로 잡는 어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연어를 양식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IUU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걸로……

○**김용태 위원**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어 양식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확인했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따로 경로는 말씀 못 드리고 여러, 지금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연어 양식장인지 어떤 현장인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희 대한민국 국적의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그 주변을 해양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해 선란 1·2호를 설치했다는 지점이 서해 저층 냉수대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어 양식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 해수부가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냉수대가 흐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우리는 지금 온누리호가 전기탐사 형태로 연간 2~3회 정도 서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리고 또 따로 해경이 전용으로 계속 주변을……

○**김용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은 시설을 고정해 두고 상시로 해양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너무 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곧 해양주권을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게 단순히 양식시설로 추정된다고 해서, 관리시설이 철수했다고 해서 이걸 좀 주의를 놓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관님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정보 당국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작년, 2025년 3월 자 기사로는 선란 3호가 곧 설치될 거다, 25년도 기사로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12개가 더 설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작년 예측 기사로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수협법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존중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달라 가지고 여쭙보고자 합니다.

수협중앙회, 협동조합의 회원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회원이 전국……

○김용태 위원 출자하신 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 법인? 지역수협이겠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지역수협.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수협 조합원, 일반 조합원이 법적으로 지금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나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용태 위원 일반 조합원도 갖고 있어요? 농협하고 다른 구조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우리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중앙회의 회원이 어덱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회원조합.

○김용태 위원 조합이지요, 법인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조합을 일반 조합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중구조이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특성상, 취지상 법적인 회원이 아닌 분한테 표결권을 주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근간이라든지 취지를 벗어나서 입법할 수 없다는 점을 수협회장님께서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긴 하나 13조 2항에 따르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을 제·개정할 때는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2항 부칙도 있습니다. 수협회장님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협동조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 내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장관님, CPTPP 회원국이 12개 회원국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이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지요. 12개 가입국에 전원 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 품목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CPTPP는 가장 주도국이 어딘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본입니다.

○이개호 위원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이개호 위원 맞습니다. 특히 멧게를 비롯한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러니까 수산물의 전면 개방을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로 봐서 수산물 개방해 줄

수 있나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직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위원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버텨도 해수부에서 CPTPP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국민들한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CPTPP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신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선원 직불 그다음에 조건불리 직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취지가 조금씩 달라요. 어선원은 소득 보전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취지로 지금 직불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어선원 직불이 됐든 조건불리 직불이 됐든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절반밖에 안 돼요, 한 50% 내외.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직불금이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이 점은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가 다른데서도 중복 신청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전면적으로 그걸 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정한 정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재부 쪽이랑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13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개호 위원 중복 허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면 허용은 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두 가지 취지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자원보호 직불 관련해서 지금 5t 미만은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 근해어선, 그건 주로 10t 이상이 되겠지요. 여기는 자원보호 직불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t부터 10t까지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t부터 10t에 대해서도 경영 안정 또는 중규모 연안어선 직불 이러한 것들을 좀 신설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것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해서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20인으로 돼 있는 부분을 10인으로 낮추는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저희 지역구 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굴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조기 어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건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개호 위원 요즘 국내 어장에서 참조기가 거의 어획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동지나해를 거쳐서 남중국해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국내 자원 평가지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있는 자원이라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지체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획 금지체장이 15cm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한 20cm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어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금지체장을 좀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려서라도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삼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차례입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CPTPP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실제로 CPTPP는 수입국의 위생·검역 조치에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WTO보다 높아서 수입 규제국인 우리나라가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말로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WTO 규정보다 우리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대응 논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국내 수산업 피해 규모나 소비 위축 영향에 대해서 정밀한 추적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못하면 국내 부처 간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부를 포함한 산자부의 요구와 어민들의 요구가 국내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앞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입증책임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은 합시다만 정부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지금 여전히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인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에요. 우리가 2019년도에 WTO 상소기구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CPTPP는 수입하는 나라의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서 훨씬 더 과학적인 근거나 철저적인 정당성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WTO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WTO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가능해. 우리 의지로 이걸 막아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냐는 걸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지금 CPTPP에서 요구하는 위생·검역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CPTPP하고 지금 후쿠시마 8개 현 부분은 별개로 간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위생·검역 이런 부분들은 CPTPP 기준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대응하는 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WTO에서 이겼어’ 이것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 시나리오별로 대응 논리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산보조금 축소와 관련된 압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수산보조금 철폐됐을 때 닥칠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남획된 어족에, 그건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런 경우이나 면세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큰 걱정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면 협정국이 이전에 2년간 지급된 보조금 내역, 다시 말하면 법적 근거, 어종별 어획량, 어종 상태, 어선단 규모, 보존관리 조치, 종별 수출입량 이런 것하고 연료보조금을 특별히 명시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보조금 통보의무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하고 협정문 자체가 과잉어획 유발 보조금의 궁극적 철폐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최근에 WTO 수산보조금 협상 역시 CPTPP나 USMCA 수준의 엄격한 규범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 점을 볼 때 앞으로 핵심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 압박에 직면할 위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원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자원관리를 위해서 지금 TAC 그다음에 어획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 법체계를 갖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장기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중장기 대응 전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장관님, 항만공사 얘기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항만공사에 대한—가칭이겠지요—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한다고 그런다면 통합체를 어떤 구조로 간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재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해수부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것도 좀 무책임하다. 지금은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가는 거에 어떤, 갈 때 이게 문제점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대응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긴급경영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서, 이것은 문금주 위원님 안 계신데 정치권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서 그 당시 농협의 수매 비용—제 기억입니다마는—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그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검사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정부 요구에 의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증액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도 지금 몇백억씩 들여서 추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검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은 효과로서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사회적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미흡 판정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1000억에서 다시 200억으로 원상복구가 됐지요. 그런데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예산은 완전히 퍼주기 예산으로 지금 둔갑돼 가지고서, 사실 이때의 목적은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 자금으

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수산물 상생할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비 촉진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께서 수산물을 조금 더 저렴하게 받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어쨌든 빨리 수요가 안 돼서 과잉 생산된 수산물들의 공급 판로를 열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자들을 돕는 기능까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이때 예산을 증액할 때 수산·어업인들한테 지원해서 원가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것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왜 정부 돈을 가지고서 원가를 낮추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당신네들이 팔아서 정상적인 소득으로 가져가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상생할인 예산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퍼주기 그다음에 시장 교란 이런 위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계신 분들, 국장님들 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돈을 이렇게 소비자들 중심으로 결국 유통망, 유통기관들한테 나가는 이런 돈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인지 우리 수산인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는 다시 이 부분은 또 토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창장님,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 유통, 면세유도 있을 수 있고 과세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불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조승환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과거처럼 면세유를 부정 포탈해 가지고 유통을 시켜서 막대한 부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기름이라는 게 잔존유라는 게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창청소업 해경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보충질의 없는데……

○**조승환 위원** 보충질의 없어요? 그러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도 하나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하던 것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 감척을 시한을 정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공감을 표시하셨고 수협중앙회장님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실 텐데 조속히 수립하셔서 대안 저희 방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성범 위원** 저는 이 제도를 설계하는 데 핵심은 결국은 어떻게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냐, 수용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척 단가를 어떻게 조금 더 상향

조정, 현실화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고 적어도 근해어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출구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동안 어차피 어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수협으로부터? 그래서 대출 갚고 그리고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하고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안을 좀…… 그러면 결국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까지 연결이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중앙회장님은 해수부에서 이런 안 만드는 데 수협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내시고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진행 상황 하나만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임위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을 해 주셔서 우리 수역에서 외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을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거를 실무적으로 이행을 하려 그러면 대검인가요?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같이 연계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 개정이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담보금은 대검하고 협의를 해서 다 개정이 됐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해 주셨듯이 서해 NLL에서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강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벌금·과징금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위원님, 잠깐 좀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담보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서는 가을 여기에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안은 정부와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중간 점검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역 현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리나 기본계획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거점 마리나 사업도 조금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고 그 외의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나 민간 사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기대는 높는데 추진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화순항 마리나 예정 구역도 2015년에 한 10년 전에 지정이 돼

서 제가 이번에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더니 ‘이거는 희망고문이다,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불멘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지자체 사업 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방안을,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갑갑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제주도청하고 또 지역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 방향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에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마리나 예정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유망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진하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설명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랑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 담당자 한번 보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내수면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수면 어업 허가인데 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지, 이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상적이지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를 들면 수산업법에는 어업 허가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근거가 있지만 내수면어업법에는 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법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 정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제가 내수면어선 선박검사 보험 가입 가능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어요.

장관님, 내수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행 어선법상 대다수의 소형 내수면어선은 선박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된 선박검사 증서가 없어서 수협이 어선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이것에 가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내수면 어업인 분들도 어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파악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또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 어업인들이. 그래서 좋은 정책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지자체 및 내수면어업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장 검사를 할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 특히 검사 수검 과정에서 어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주신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삼석**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 주셨던 수산물 상생할인 자금 예산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거는 누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협중앙회장님, 수협중앙회라고 부르고 있지요, 수협연합회라고 안 부르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중앙회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 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면 연합회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1항의 적용 규율을 받아서 기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대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라고 부르고 있고 연합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장관님, 북극항로 시범 운항 22일 날 닻을 올렸어요. 지난 4월 시범 운항 선사 공고 이루어졌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선박 확보, 보험 가입, 러시아 정부와 통항 허가, 대러 제재 검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나 잘 해결해서 시범 운항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해수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러 제재 문제,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컴포트 레터가 메일로 받은 겁니까,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런 거는 확인드릴 수는 없고 일단 외교 당국을 통해서……

○**윤준병 위원** 받은 거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상 2016년 7월에 중단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별도 해수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들은 계속 제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일본 측에서 아직은 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윤준병 위원** 하여튼 CPTPP 등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넣어서 우리가 아쉬운 내용들은 받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노력이니 만큼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대체어장 출어경비 이것도 좀 현실화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서해 NLL 불법 조업,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해경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저는 가을철을 앞두고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은 시기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좀 더 추가돼야 될 내용이 단속 중 부상을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대원들 여기에 대한 적극적 피해 보상, 치료 지원 체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전에 하려다 말았는데 거기에 담보금, 벌금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다 귀속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사실은 입법하면서 저희들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해수부가 다른 지원책 마련하겠다, 법률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니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 넣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른 대안 마련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금이 바로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은……

○**윤준병 위원**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법으로 그걸 좀 떼어서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해수부가 다른 대안책을 좀 마련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준병 위원**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귀어·귀촌 사업, 없어져야 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제대로 담보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수산물이력제 시행된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 작년 결산 현황 보니까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 가운데 이력 관리 물량 17.4%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로는 자율 참여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손놓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장 서삼석**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가요? 수산물을 확대를 해 나가

실 생각이예요, 아니면 줄여 나가실 생각이예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친환경 수산물은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친환경 수산물, 특히 김에 대한 인증 직불제 사업지침을 보면 5년간은 어가당 6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5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이고 또 지금 단가도 그동안에는 양식 면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판매 실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오히려 ha당, 면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는 해수부에서 장관님께서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장흥과 같은 경우는 약을 안 치는 무산김이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친환경 김 양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옆의 지역에서는 친환경 아니고도 더 많이 생산이 돼서 더 많은 직불을 받는데 친환경 생산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 의욕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있는 것 명맥이라도 유지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전 지침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분들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게, 사기 진작을 해 주시는 게 낫다, 전향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지금 산지 가격이 급락한 수산물들, 저는 특히 우리 지역에 전복하고 장어들이 많은데 해수부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소비 촉진 지정 품목도 하고 해서 일시적인 할인 해 주고 막 하는데 저는, 물론 일정 기간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할인도, 할인 품목 지정해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할인 지정 품목도, 왜 전복은 7월 달에 포함이 됐는데 장어는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저장이 되어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관이 되어야 나름 수급 조절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 사진 나온 것 있으면 보여 주면 좋겠는데 유명 회사에서 햇반을 제작하는데 전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복이 아니더라고.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 우리 국내산 해 주면 좋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국내산으로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간편식. 그래서 저는 해수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필요하다면 기업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또 한번 넘겨 보세요.

한국어촌어항공단 오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GS리테일하고 협업해서 복날 장어 간편식

을 만들어 가지고 완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회장님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수협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이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너구리, 오뚜기 아닙니까? 완도산 김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 소비 촉진
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수부가 그런 기관들 좀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소비 촉진, 판매를 올릴 수 있는,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어 같은 것도 입식 쿼터제 시범 MOU 3년 뒤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년 뒤
기다리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죽어요. 시범사업을 좀 당겨서 입식 쿼터제를 빨리 도입하고 출하관리시스템 일본에
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십니다.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부산항 관리와 관련해서 마저 질문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부산항의 입출항 관리업무 중에 법에 보니까, 선박운항
의 안전·질서 유지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입출항법에 이게 관리가 해수부장관으로 돼 있
어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다시 위임이 돼 있을 겁니다, 부산청으로.

○임미애 위원 부산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부산항만청으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부산항만청으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리고 입출항은 아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임미애 위원 지방해양청으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이것 잘 들어 보세요.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중국 참치잡이 어선 룬다 3호·5호 이 두 배는 악명 높아

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 참치잡이 어선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해수부가 당시 NGO인 환경정의재단 요청으로 이미 정보를 듣고서 검색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원래 3월 10일 날 감천항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배가 갑자기 항로를 바꿔서 피지로 갔거든요. 다른 나라로 갔어요. 만약에 이때 이런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시스템을 해수부가 구축을 했더라면 이번 7월과 같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해수부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악명 높은 배에 대해서 항구 이용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할까를 살펴봤더니 해수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법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로 제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형법 제296조의2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제2조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탄압이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고위험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해수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 선사의, 이번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대리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선원의 여권 압수하고 감금한 입출항 대행업체가 해운법의 해운대리점업에도 안 되어 있고 선원법의 선원관리사업자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의 관리감독망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사 국내 대리점에 대한 인허가 기준 그리고 관리감독 규정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데 해운대리점업으로는 원양어선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른 어떤 것으로 등록을 해서 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입허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인신매매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선원 자격을 가지고 와서 태우려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배가 들어온 상황만 가지고는 사실은 인신매매인지 아닌지 불법적으로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배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또 불법 어획물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마 PSMA라고 항만국 통제와 비슷한 어업 쪽에 있는 통제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법 어획물 통제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대책 세우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 대리점ियो, 외국 선사의 국내 대리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수부가 대책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법무부라든지 다른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해경청 차장님!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박유, 과세유든 면세유든 이런 것에 대한 유통의 부분, 불법적인 유통의 부분이 그 필요성이나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구조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준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강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잔존유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조승환 위원 유창 청소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잔존유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사실 제일 좋기는 정유회사에서 남은 것 실어 준 만큼…… 지금은 해수부에서 급유선들 대응하면서 순차적으로 급유하도록 제도를 바꿔 놔는데 이게 다시 지금 한 항차, 한 대밖에는 기름을 못 넣는다면서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 제가 좀……

○조승환 위원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정유사에서 받아 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기름의 퀄리티 컨트롤 부분 때문에 정유사에서 절대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통구조를, 이게 만약에 면세유였다 그런다면 과세를 해서 유통이 되도록 하고 과세유였다 그런다면 이미 과세가 됐으니까 과세된 상태에서 유통이 되도록 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사실 불법 유통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사실은 세금이 안 붙는 기름이 유통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세금을 매겨서 정상적으로 유통을 하도록 하면 면세유에 대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잔존유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법적·제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원체 세금 문제가 같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기름 팔아먹는 사람들이더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 잔존유를 어떻게 관리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는가, 유통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한번 하세요.

○문금주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삼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5항까지 43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김선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빠지신 분 안 계시지요?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더 이상 폭우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반복이 예상되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위원회 또 사무처와 경호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수요일 오후에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승규 김선교 김성범 김용태 문금주 서삼석 송옥주 신장식 윤준병 이개호
이상희 이성권 이양수 이재관 임미애 조승환 주철현

○청가 위원(2인)

강선우 문대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윤성민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차관 남재현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이수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권순욱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항만국장 공두표

대변인 류종영

정책기획관 이상호

해양정책관 유은원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세월호추진단장 조승우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오행록

유엔해양총회준비기획단부단장 임지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조일환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허만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용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정태성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최국일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경비국장 임재수
구조안전국장전담직무대리 정육한
수사국장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김시범
해양오염방지국장 김한규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해양경찰교육원
원장 고민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단장 김덕경
해양경찰정비창
창장직무대리 박원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장전담직무대리 박재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백학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하만식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전담직무대리 이종욱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여성수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경영부사장 정원동
운영부사장 간주태
건설부사장 김호영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경규
경영부사장 김순철
운영부사장 김상기
건설부사장직무대행 박진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최관호
경영부사장 황학범
운영부사장 홍상표
개발사업부사장 권동진
울산항만공사
사장 변재영
경영본부장 정우용
운영본부장 정순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노동진
감사위원장 김창균
지도경제대표이사 김기성
조합감사위원장 양동엽
기획부대표 신황용
교육지원부대표 우동근
경제사업부대표 이승룡
금융지원부대표 이옥진
수협은행
은행장 신학기
상임감사 최기정
집행부행장 도문옥
집행부행장 장문호
집행부행장 최민성
집행부행장 이준석
집행부행장 오미석
집행부행장 김혜곤